

당국 “오미크론새 변이, 지역사회 전파 확산 확인 안돼”

국내 검출 XL·XE·XM 변이 추가전파 “분석 중” 스텔스보다 전파력 20% 빠른 변이, 미국 확산

지난 2주간 국내에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XE·XM 변이가 연이어 발견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 빠른 신종 변이가 확산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

팀장은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검체 확보가 가능한 사례들을 추가 분석 중”이라며 “아직은 지역사회 추가 전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XL·XE·XM은 모두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로, 지난주까지 XL 변이 감염 사례가 13건, XE 감염 사례가 2건, XM 감염 사례가 1건 확인된

상태다.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XL, XE, XM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확산이 보고되지는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추가감염은 아직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변이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유행 확산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미크론 세부계통을 기존 4개에서 83개로 재분류하면서 ‘스텔스 오미크론’도 5종류로 세분화됐다.

이 단장은 “이 중 특히 작년 12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12.1의

경우 최근 빠르게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높은 전파 속도를 가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가 20% 정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국내 검출 사례는 없지만, 도입됐을 경우 방역대책을 일부 강화하거나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변이는 전날 기준 미국, 캐나다 등 14개국에서 4720건이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2주 만에 점유율이 6.9%에서 19%로 높아졌다. 뉴욕보건부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3~27% 빠른

검출증가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른 전파 속도로 이미 우세종이 됐다. 4월3주차 기준 국내 검출률은 94.2%로,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해외 유입 사례는 88.9%다.

이 단장은 “대부분의 세부계통이 확진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서 유행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WHO의 분류 변경에 따라, 국내에서 확인된 XL이 업데이트된 분류체계가 적용되어 XQ로 재분류됐다. 오유나기자



기자회견하는 환경보건의민센터. 환경보건의민센터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슴기살균제 기업 규탄 및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 학부모 단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교육 옹호 수단”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기자회견

광주 지역 학부모들로 구성된 광주바른교육 시민연합 소속 회원 60여 명은 26일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환경으로 바뀌 가능성이 크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름과는 달리 동성애·성전환 독재법이자 대다수 국민의 역차별법”이라며 “현행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사회를 50여 가지

성별을 인정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가장 먼저 교육 분야가 동성애 옹호 내용으로 바뀌 것”이라며 “학교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해 아직 분별력이 약하고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단체는 “일반 범의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사실적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법으로 금지돼 있고 행위에 대한 비난은 의견 표현이기에 금지돼 있지 않다”며 “차별금지법은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한 취급을 해 나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포장한다.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제시할 수도 없고 동성애가 잘못되고 나쁜 행위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다른 나라의 성중립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성추행 사건들은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모든 차별을 금지하자며 무조건적인 절대 평등을 외치는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재환기자

경찰, ‘2019 생존수영교실 보조금 유용 정황’ 광주시청 등 압수수색

체육진흥과·시체육회 등 8곳 압수수색

경찰이 광주수영연맹 주관 2019 생존수영교실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청과 시체육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26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시청 체육진흥과와 시체육회 공적감사팀 사무실 등 8곳에 수사관 17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2019 생존수영교실 보조금 집행 과정에 있어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반재신 광주시의원은 지난 달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19생존수영교실 운영에 있어 보조금 유용 의혹이 있다”며 “광주시가 감사와 동시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반 의원은 “생존수영교실 참가자 명단과 참석자 현황이 불분명하다”며 “광주시의 2019 생존수영교실 정산서에는 인건비 3700만 원, 일반운영비 1100만 원 등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320명에게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돼 있지만, 수영장 측 일부 관계자들은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묵격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길거리서 흥기 들고 행인 위협한 50대 검거

경기 고양시에서 흥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20대 남성 B씨에게 흥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흥기를 계속 들고 버티자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